

“도민 민생안정 최우선”

김 지사, “내년 국가예산 확정 후속조치, 2026년 신규사업 반영 준비” 주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5일 긴급 간부회의에 이어 개최된 16일 간부회의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도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5년 국가예산을 확보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어렵게 반영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반영된 사업들은 논리를 세밀하게 보강해 내년 중 편성이 예상되는 정부 추경이나 2026년 부처 신규사업에 적



유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심사에 대응해야 한다”며 “올림픽 유치 TF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은 내년 2월말 올림픽 후보지가 최종 선정될 때까지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내년의 도정 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례해 적극적으로 언론브리핑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최근 환경부의 이차전지 폐수 처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어민, 환경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에게 개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尹 탄핵안 가결, 국민의 위대한 승리”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의 새로운 변화 준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란수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간의 국회 상황 등과 향후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통해 정읍·고창,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44년 만의 비상계엄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과거 군사 독재시대로 퇴행하려 했던 명백한 내란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만으로 내란이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며 이번 탄핵 가결은 ‘과거로 퇴보하느냐 미래로 진보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첫걸음일 뿐이며, 여전히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본인들만의 이익과 안위만을 걱정하며 끊임 없이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존재한다며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동조·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수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중단된 정읍고창·고창정읍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은 내팽개친 채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감찰 특별비 및 특경비와 정부의 썩지돈으로 전락한 예비비 등을 지키는데 급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라는 구태를 고수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방해하며 민생에 필요한 예산 증액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해 필수적인 농어업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2·3 내란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 내란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기에 이해를 부탁했으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정읍고창과 전북의 발전, 그리고 농어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를 통과한 ‘농업 민생 4법’도 제대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내란수와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동조·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조정을”

오은미 도의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제4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 5,083만원 중 농민들이 실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114만 원이며, 농업의 소득은 농업소득의 1.8배에 해당하는 1,999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 외 활동으로 얻은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지른 것은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농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 농민들은 다른 부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농민들의 농업 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각종

농업 정책에서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은 2009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3,674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그 기준을 책정한 것이다.

오 의원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을 3,700만원으로 설정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가구당 평균 소득은 6,762만원까지 올랐음에도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은 여전히 3,7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들은 농업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농업보조사업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민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 여성농민에게 주어지는 생생카드 등의 농업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만호 기자

도, 주한 외교사절단과 외국인 지역 정착·광역비자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주한 외교사절단과 외국인 정책 관계자들을 초청해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광역 비자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전북과 각국 간의 교류 협력을 강

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 소개로 시작해, 일본 대사관이 발표한 ‘일본의 외국인 공생 사회 비전과 로드맵’이 이어졌다.

초청 둘째 날에는 무주 머루와인동굴과 태권도 체험 등 문화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정례회 폐회

내년 예산 1조1601억 확정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먼저, 고경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계인구 형성,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제언’을 통해 관광지간 교통 연계 개선과 특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안건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성환) 소관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2,588억6,905만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2,435억3,248만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626억4,178만원을 승인했고, ‘2025년도 예산’은 35개 사업의 35억 372만원을 삭감 후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해 1조1,601억8,620만원을 확정하고 제2차 정례회를 종료하였다.

이날, 박일 의장은 “고물가와 비상계엄령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이때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되길 기대한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들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 민생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16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고경운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무주군의회 정례회 폐회

내년 예산안 최종 의결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16일, 33일간 진행한 제313회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동안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했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35건의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24건, 처리요구 88건, 건의 65건 등 총 177건의 사항을 지적하며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12일에 실시한 군정질문에서는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인구 대책과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다뤘다. 이를 통해 군민 삶의 질과 직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군정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동)의 심사 결과 요구액(4,745억3,544만8,000원) 대비 0.223%(10억5,700만원) 삭감된 4,734억 7,844만8,000원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오광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무주군의회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넓은 시선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 주먹을 ‘불끈’

지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이날 조국 대표는 수감을 앞두고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이날 조국 대표는 수감을 앞두고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시민 힘으로 이룬 탄핵 국가대 전환의 출발점”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사회권 선진국 도약 계기로”

조 전 대표 수감에 “안타까워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해 국민과 국가가 단호히 맞서 이뤄낸 역사적 승리”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국가대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2년 반은 대한민국의 토대를 뒤흔든 시간이었다. 경제와 민생 위기는 심화되었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심각하게 훼손됐다. 윤석열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패를 넘어

선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고 했다.

도당은 “이제는 단죄와 심판의 시간”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을 인용하고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내란죄로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국가대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과 경제 회복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대표의 수감과 관련,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안타깝다며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탄소중립 정책 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도의회 농업·농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농촌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권요안)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전북농업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지역농업연구원 조경호 원장은 연구 발표에서 전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하며, 전북형 경축순환농업 모델 구축 및 시

범사업, 농민교육용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등을 2025년에 시행할 단기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 핵심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센터 구축, 로컬푸드 탄소중립 프로그램, 적정 사육두수 조정에 따른 한우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